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6

# 연금이슈

# &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 동향분석



**제118호** 2026. 04. 30.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황준호 부연구위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의 집단 규모 격차 분해

홍현기 부연구위원

## contents

<b>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b>	<b>3</b>
1. 머리말	3
2.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와 확대	4
3.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	5
4. 금융시장 및 자산가격에 대한 영향	8
5. 맺음말	11
<b>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의 집단 규모 격차 분해</b>	<b>13</b>
1. 들어가며	13
2. 분석대상과 비교기준	14
3. 경찰 임금근로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간 규모 비교	16
4.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집단의 구조	19
5. 나가며	22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황준호  
부연구위원

## 1 머리말

-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당초 4~5주 이내의 단기전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중동 지역 내 확산 가능성으로 분쟁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격은 채권,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글로벌 자금 흐름과 자산배분 환경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제적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이에 본고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 금융시장의 변화 동향을 살펴 보고 기금운용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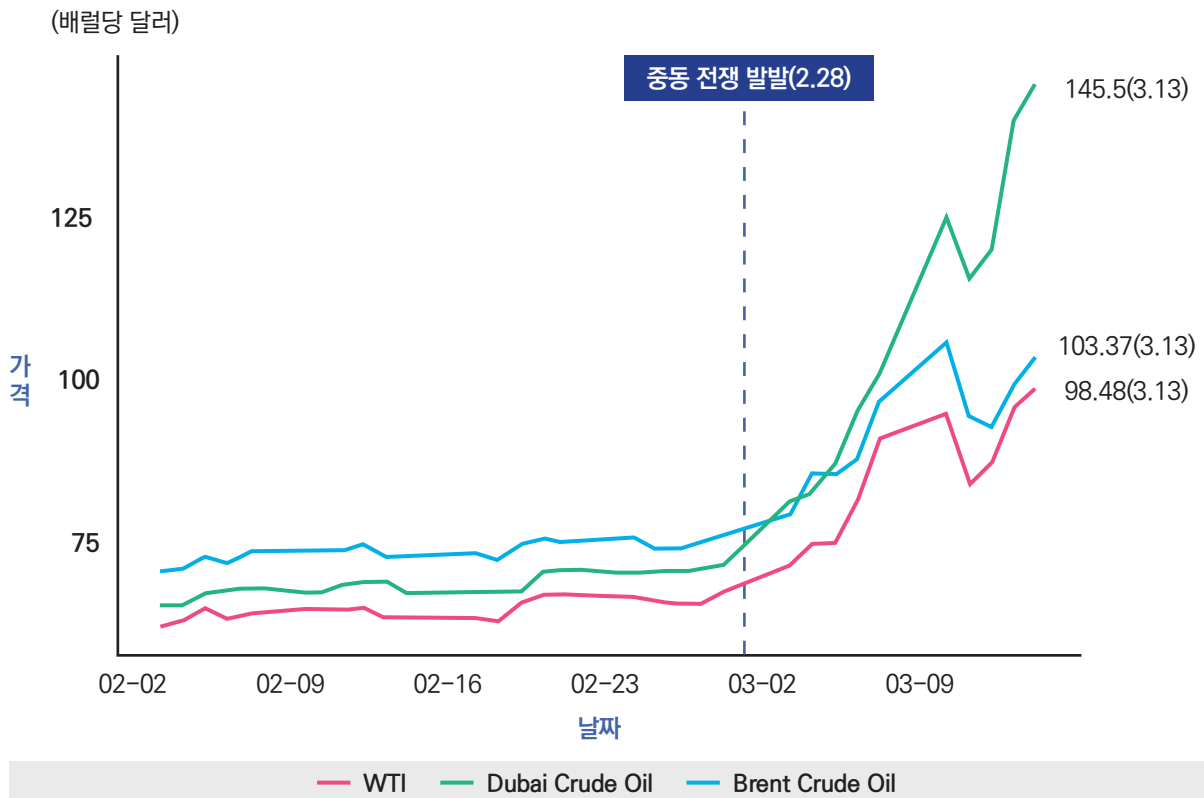
-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배경에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란 핵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5년 기준, 무기화가 가능한 농축우라늄 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이에 2026년 2월, 세 차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결렬
  
- 이후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되면서 군사 충돌이 본격화됨
  -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Epic Fury)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가 사망하고 상당수 군사시설이 타격됨
  -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카타르, UAE 등 중동 지역의 주요 에너지 생산, 인프라 시설과 미군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이 이뤄졌고,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됨
  
- 특히, 이란이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강행하면서 단순 무력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으로 확대
  - 이란의 새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선박에 대한 피격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의 불확실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mb/d)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이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 경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5%가 경유하는 해협으로 평가됨. 지리적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해협을 통한 흐름에 차질 발생은 원유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침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trait of Hormuz Factsheet, February 2026)

### 3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

- 중동 분쟁으로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 기간에 따라 원유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WTI의 경우 전쟁 발발 시점인 2월 28일 대비 47.1%,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각각 36.5%, 104.2% 상승하였음. 특히, 환율 적용 WTI(원화 환산 가격)의 경우, 원화 약세 현상까지 동반하면서 58.04% 상승하였음

<그림1> 주요 원유 현물가격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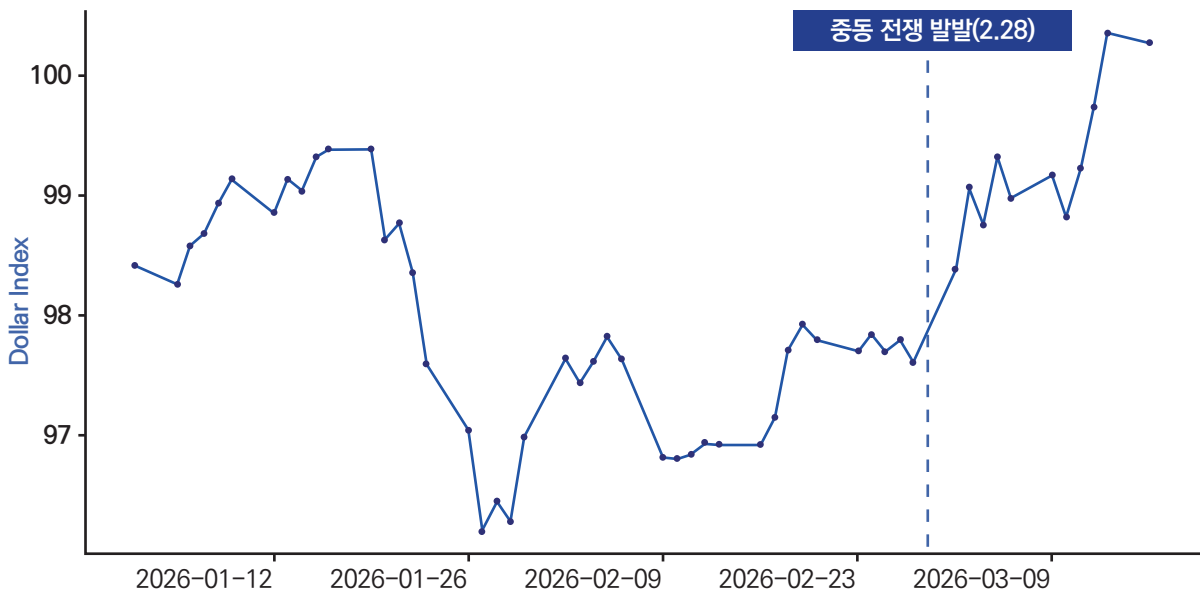
-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차질이 향후 2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4분기 평균 브렌트유가 배럴당 71달러에서 93달러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였음
- 원유가격 급등에 따라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의 안정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3월 15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아시아 지역의 전략비축유를 즉각적으로 배출하기로 하였으며 일본과 한국 등 주요국도 전략비축유 공급을 실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전략비축유의 방출이 원유가격 안정에 부분적으로 도움될 수 있으나, 중동 분쟁 관련 공급 차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점도 존재함
- 글로벌 금융기관인 맥쿼리는 전략비축유 방출량이 전세계 원유 소비량 대비 4일 정도 규모에 불과하며, 향후 분쟁 지속 기간에 따라 원유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함

###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확대

- 미국달러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 압력이 나타나고 있음.
  - 중동 분쟁 이후 달러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2026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USDKRW) 역시 3월 16일 기준, 1495.45원으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3월에만 3.8% 상승하였음

<그림2> 달러지수 시계열 추이



-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는 자본유출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원유가격과 환율의 동시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 저성장, 고물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제기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이에 중앙은행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 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음
  - 미 노동통계국은 2026년 2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이 9만 2천 명 감소했다고 집계함. 이는 연방정부 첫다운 이벤트를 제외할 경우,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감소임
  -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연준은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 한국은행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성장 및 물가 경로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며, 주요국 통화, 재정 정책, 통상환경, AI 투자 등의 전개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
- 따라서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지속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관세와 중동 분쟁으로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제 모멘텀은 둔화하고 있고 AI 관련 활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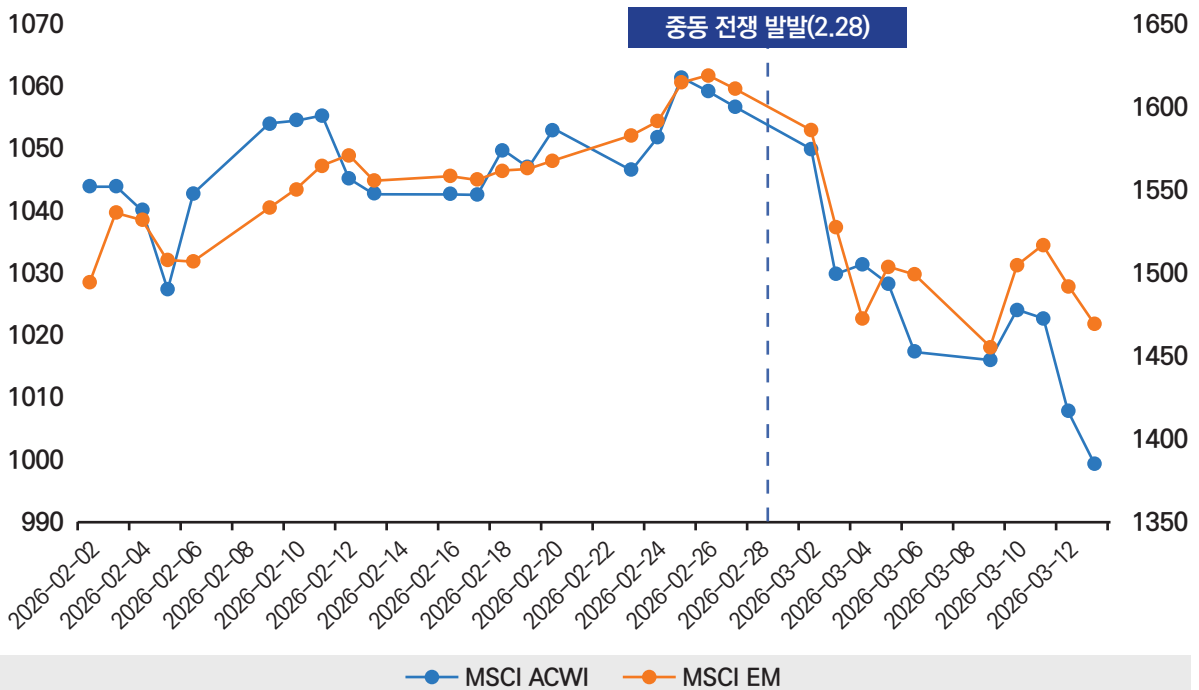
## 4 금융시장 및 자산가격에 대한 영향

■ 주식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글로벌 전체시장과 신흥국에 모두 부정적으로 영향

○ 글로벌 주식시장 지수인 MSCI All Countries World Index (MSCI ACWI)와 신흥국 주식 시장 지수인 MSCI Emerging Markets (MSCI EM) 모두 2월 말을 기점으로 동반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 3월 기준, 누적수익률은 MSCI ACWI가 -4.82%, MSCI EM이 -7.33%로 글로벌 증시 대비 신흥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

<그림3> 글로벌 주식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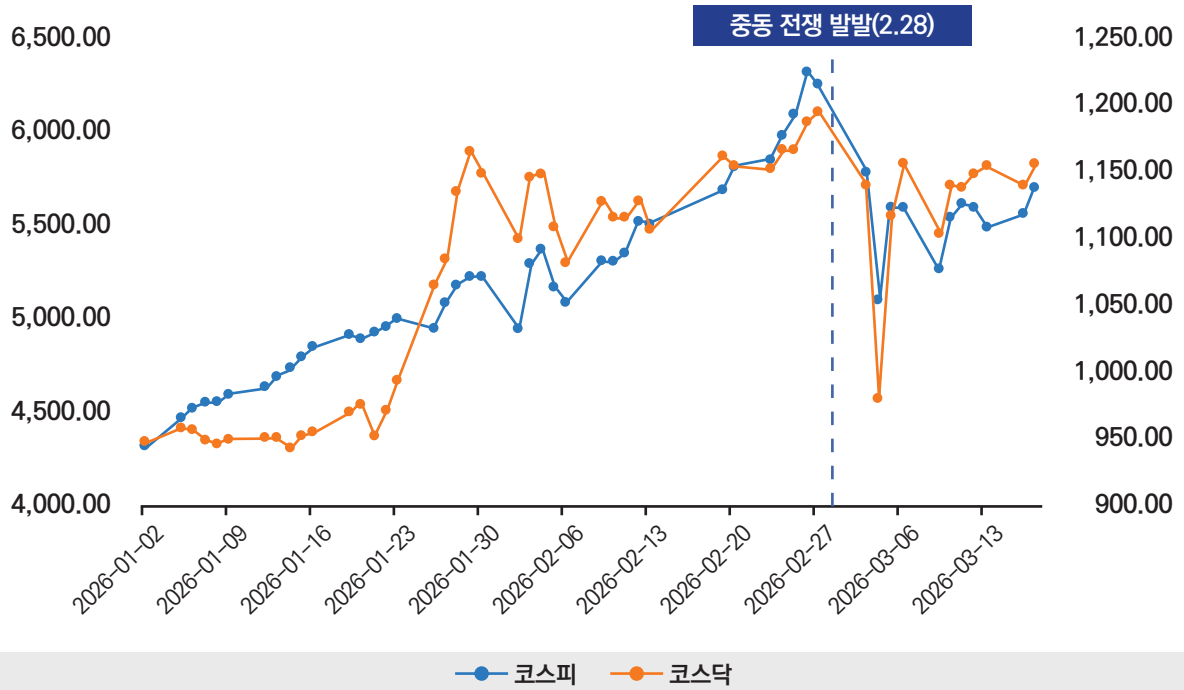


○ 국내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3월 초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06%, 코스닥 지수는 14.00%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였으나 하루 만에 반등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함

- 이후 원유가격과 환율 변화에 따라 가격 등락이 이어지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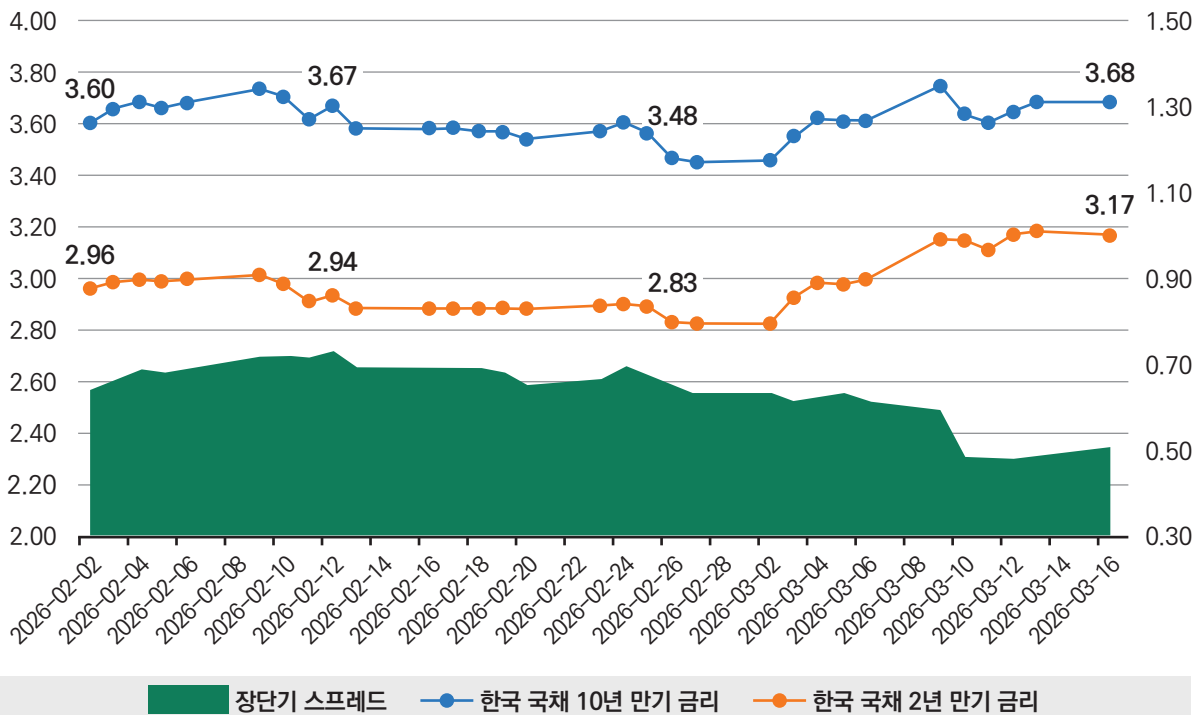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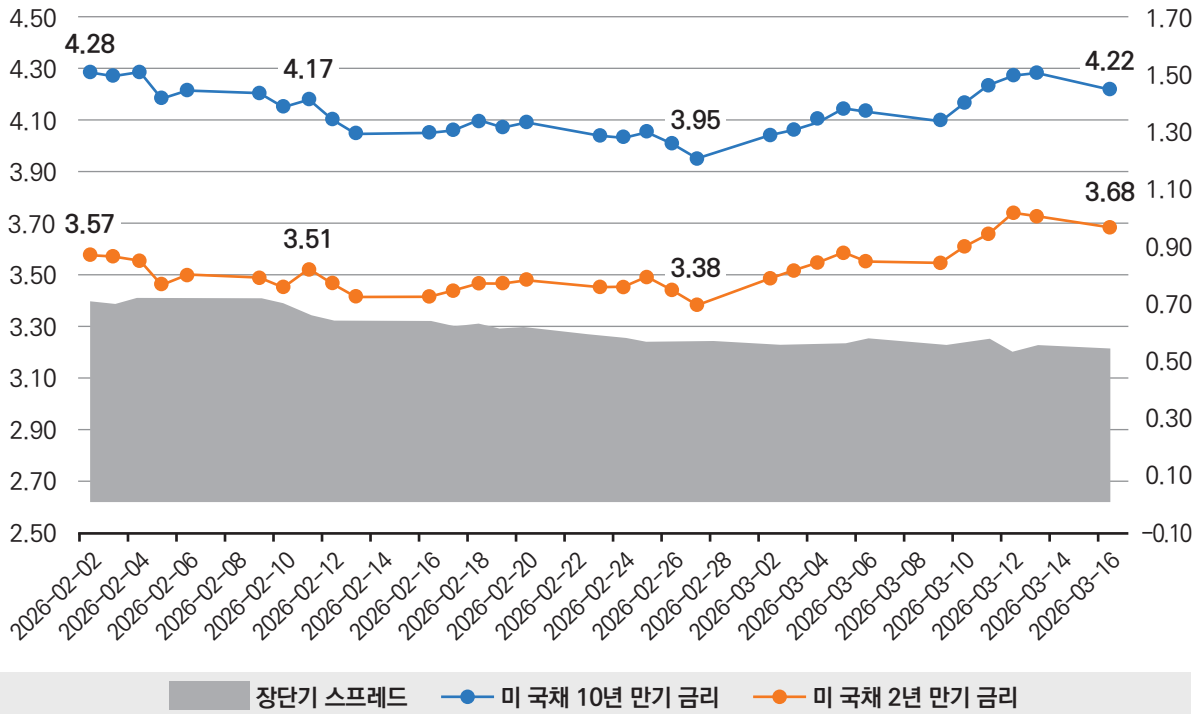
&lt;그림4&gt; 국내 주식시장 추이



#### ■ 채권금리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

- 미국 2년 만기 국고채와 10년 만기 금리(3월 16일 기준)는 각각 3.67%, 4.22%로 중동 분쟁이 본격화된 2월 말 대비 상승
  - 특히, 장단기 금리차(10Y-2Y)가 0.70%p 수준이었던 2월 초 대비 0.54%p로 축소되었음.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로 인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한국 국채 역시 장단기 금리가 소폭 상승
  - 국고채 2년 만기와 10년 만기 금리는 각각 3.17%, 3.68%로 2.96%, 3.60%를 기록한 2월 초 대비 상승하였으며 장단기 금리 차이 역시 축소되고 있음. 하지만 미국에 비해 금리 변화 폭은 제한적인 모습
  - 이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향후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확대해 장기물 금리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5> 채권수익률 추이



## 5

## 맷음말

### ■ 거시경제 동향: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진입 대비 필요

-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장기화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성은 단순한 지정학적 이벤트를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 통화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제의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요 거시 지표 변화와 중동 지역의 분쟁 양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임

### ■ 금융시장 동향: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리스크 경계

- 글로벌 주식시장은 대외 충격에 반응하며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신흥국 주식시장의 하방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채권시장 역시 향후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음

### ■ 기금운용 시사점: 자산운용 정책 점검과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필요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경우,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과 자산배분 환경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차원에서 정책 점검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요
- 구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은 해외주식 자산군 위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할 수 있는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군 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지역별 투자 비중의 적정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달러 강세 등 대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외투자 운용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응여지 확보가 필요함. 즉, 환율상승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포트폴리오 운용 차원에서는 위험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함.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과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국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자산 혹은 운용전술의 다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1] BNN Bloomberg. (2026, March 11). Market Outlook: IEA oil reserve release may not calm crude volatility.
- [2] IDN Financials. (2026). Goldman Sachs raises Brent price forecast to US\$71 per barrel. <https://www.idnfinancials.com/news/62127/goldman-sachs-raises-brent-price-forecast-to-us71-per-barrel>
- [3] Reuters. (2025, September 4). Iran's near-bomb-grade uranium stock grew before Israeli attack, IAEA say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rans-near-bomb-grade-uranium-stock-grew-before-israeli-attack-iaea-says-2025-09-03/>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의 집단 규모 격차 분해



홍현기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함
  - \* 당연적용사업장이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 그러나 실제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행정자료를 비교해 보면 경활 상 임금근로자 집단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남
  - 경활 임금근로자(상용·임시) 집단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집단의 연도별 격차는 다음과 같음 (<표 3-1> 기준)
    - 2021.12, 296.6만 명 → 2022.12, 305.2만 명 → 2023.12, 324.9만 명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곧바로 국민연금 미가입 규모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국민연금 행정자료의 사용자\* 집단은 경활 종사상지위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음
    - \*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함
      - 예를 들어 개인사업체 사용자는 경활 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법인사업체 사용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음
  - 또한 응답자의 답변에 기초한 조사자료와 공식적인 행정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자료의 특성 차이로 인한 간극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경찰 상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자가 사업장가입 체계에 얼마나 포착되고 있는지, 포착되지 않는 체계 밖의 집단은 주로 누구인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함임
  - 이는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적 보호의 공백을 가시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임
- 이에 본 고는 두 자료를 연계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체계와 노동시장 구조 사이의 간극을 구조적으로 분해하고,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근로자'란,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상용·임시)로 종사하고 있으나, 제도적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법상 가입 대상임에도 실제 가입이 누락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착되지 않은 집단으로 정의함

## 2 분석대상과 비교기준

- 본 고는 국민연금공단 내부행정자료(12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및 연금통계(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분석 대상은 사업장 가입 제외 연령을 고려하여 18~59세로 한정함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 대상임. 단,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함
  - 분석 기간은 해당 자료를 공통으로 이용 가능한 2016년~2023년으로 설정함
- 사업장가입자에 대응하는 경찰 상 비교집단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구성함 (〈표 2-1〉 참조)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나 경찰 상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크지 않고 비교의 단순화를 위해 제외함
    - \* 일반·건설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함
    -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2023.8) 기준 전체 일용근로자 대비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약 1.5%임

- 경찰의 임금근로자는 직역연금 가입자도 포함(군인 제외\*)하고 있어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에서 직역연금 가입자를 추가로 활용함

\*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은 경찰 조사대상에 제외됨

- 연금통계의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를 합친 수치임
- 경찰 비교집단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개인)과 그 외의 사업장가입자(특수 직역연금가입자 포함)로 구분함 (<표 2-1> 참조)
  - 이는 사용자(개인)을 경찰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대응시키기 위함임

<표 2-1> 경찰-국민연금 행정자료의 대응관계 구성

비교축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연금 행정자료
임금근로자	상용 + 임시근로자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개인)] + 특수직역연금가입자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사용자(개인)

주: 특수직역연금가입자는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데이터임

- 다음으로, 본고는 두 자료 간의 차이를 전체 격차로만 보지 않고, 임금근로자 축의 격차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 축의 격차로 나누어 살펴봄
  - 전체 격차 = 경찰 비교집단 - 사업장가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임금근로자 축의 격차  
= (상용 + 임시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사용자(개인)]
  - 자영업자 축의 격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사용자(개인)

- 따라서 전체 격차는 다음과 같은 분해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begin{aligned}
 \text{전체 격차} &= \text{임금근로자 축 격차} + \text{자영업자 축 격차} \\
 &= [(\text{상용} + \text{임시}) - (\text{사업장가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text{사용자(개인)})] \\
 &\quad + [(\text{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text{사용자(개인)}]
 \end{aligned}$$

### 3 경찰 임금근로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간 규모 비교

- 경찰 비교집단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비교한 결과, 2016~2023년 동안 지속적인 격차가 나타남(〈표 3-1〉, 〈그림 3-1〉 참조)
  - 12월 기준 전체 격차는 2016년 346.1만 명에서 2023년에는 250.3만 명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임
  - 다만, 세부 흐름을 살펴보면 팬데믹(2020년) 이후 격차가 재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또한, 팬데믹 이후 경찰 비교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집단 또한 동반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이러한 전체 규모의 증가세는 주로 노동시장 내 상용근로자 규모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3-1> 경찰 비교집단과 사업장가입자 및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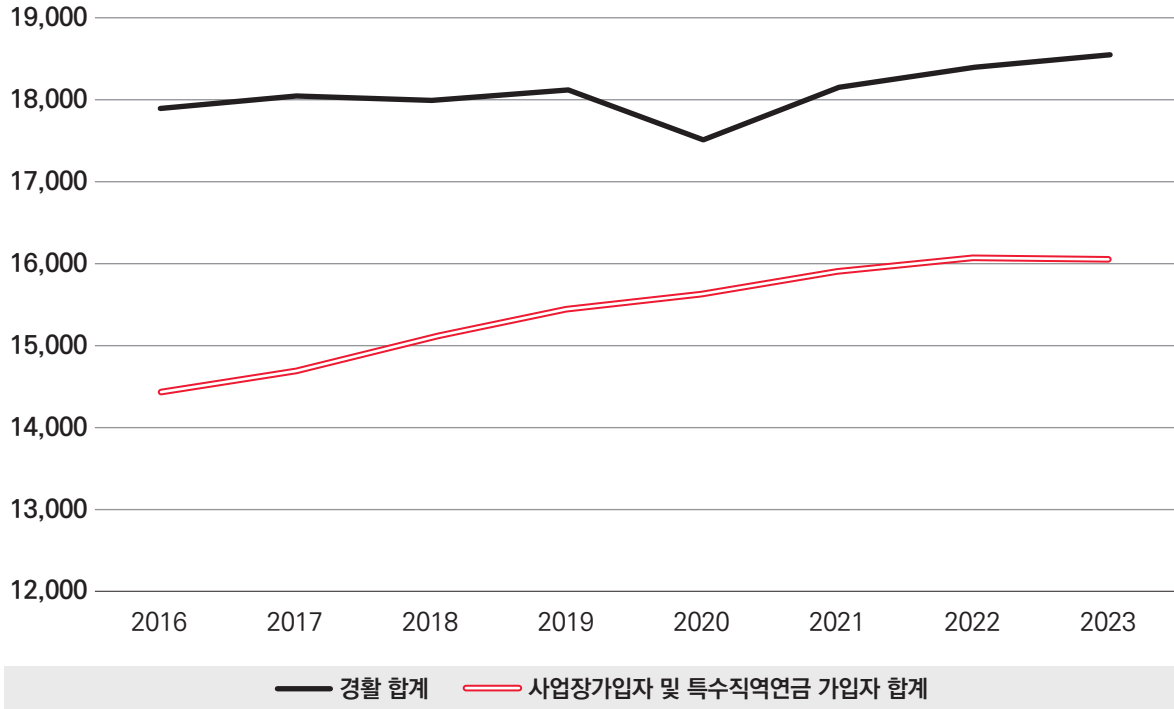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연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경찰 합계 (A)	사업장 가입자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사업장·특수직역 합계 (B)	전체 격차 (C=A-B)
2016	12,412	4,077	1,394	17,883	12,796	1,626	14,422	3,461
2017	12,734	3,916	1,397	18,047	13,055	1,638	14,693	3,354
2018	12,970	3,662	1,355	17,987	13,403	1,684	15,087	2,900
2019	13,416	3,516	1,176	18,108	13,708	1,727	15,435	2,672
2020	13,300	3,144	1,060	17,504	13,856	1,762	15,618	1,885
2021	13,808	3,257	1,083	18,148	14,099	1,797	15,896	2,253
2022	14,208	3,087	1,086	18,381	14,243	1,825	16,068	2,314
2023	14,396	3,061	1,082	18,540	14,208	1,829	16,037	2,503

주: 1)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2) 표의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백 명)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으며, 합계 및 격차는 반올림 전 원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3) 경찰 합계 (A)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합  
 4) 사업장·특수직역 합계 (B)는 사업장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합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행정자료(12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12월),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연간)

**<그림 3-1> 경찰 비교집단과 사업장가입자 및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천 명)



주: 범례에 대한 설명은 <표 3-1> 참조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행정자료(12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2월),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연간)

- 전체 격차의 구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축 격차와 자영업자 축 격차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두 축 모두 장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3-2>, <그림 3-2> 참조)

  - 임금근로자 축 격차는 2016년 282.5만 명에서 2023년 223.2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임
  - 자영업자 축 격차는 2016년 63.6만 명에서 2023년 27.1만 명으로 크게 축소되며 더욱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 이처럼 두 축 모두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2023년 기준 전체 격차(250.3만 명) 중 약 89%(223.2만 명)는 여전히 임금근로자 축에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체계와 노동시장 간 격차의 핵심 요인이 자영업자 축 보다는 임금근로자 축에 있음을 시사함

<표 3-2> 임금근로자 축 및 자영업자 축 격차 분해

(단위: 천 명)

연도	상용+임시 근로자 (A)	사업장+특수직역 -사용자(개인) (B)	임금근로자 축 격차 (C=A-B)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D)	사용자 (개인) (E)	자영업자 축 격차 (F=D-E)	전체 격차 (C+F)
2016	16,489	13,665	2,825	1,394	757	636	3,461
2017	16,650	13,910	2,740	1,397	783	614	3,354
2018	16,632	14,280	2,353	1,355	808	547	2,900
2019	16,932	14,613	2,319	1,176	822	353	2,672
2020	16,444	14,789	1,655	1,060	830	230	1,885
2021	17,065	15,051	2,014	1,083	845	239	2,253
2022	17,295	15,232	2,063	1,086	835	251	2,314
2023	17,457	15,225	2,232	1,082	811	271	2,503

주: 1) 사용자(개인)은 사업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체의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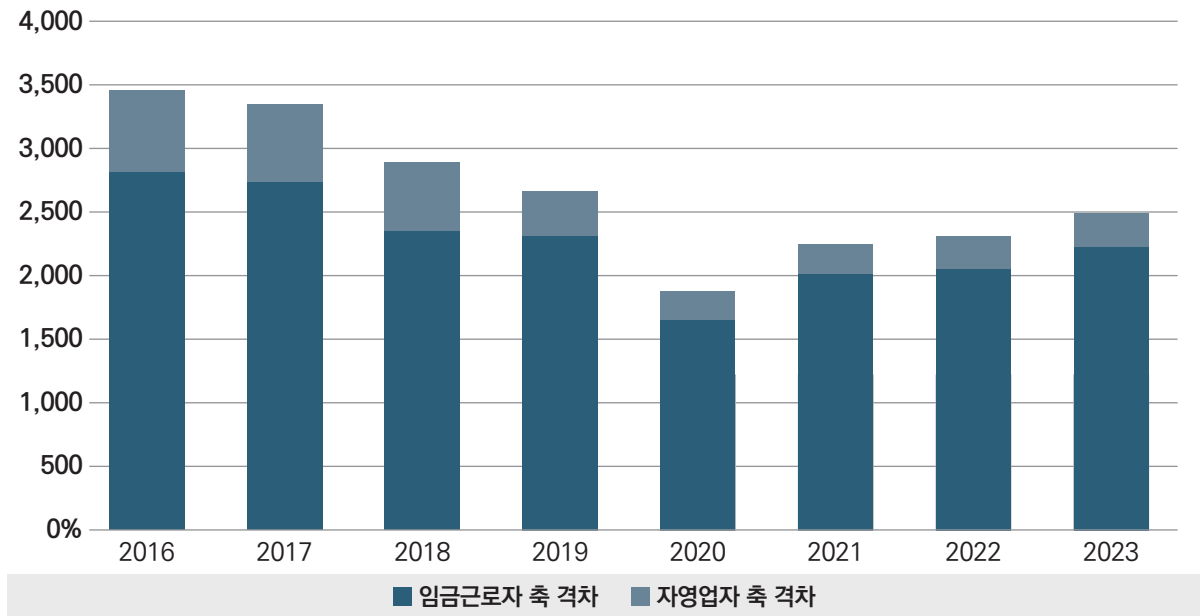
2) 상용,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3) 표의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백 명)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으며, 격차는 반올림 전 원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12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12월),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연간)

<그림 3-2> 임금근로자 축 및 자영업자 축 격차 추이

(단위: 천 명)



주: 범례에 대한 설명은 <표 3-2> 참조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행정자료(12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12월),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연간)

## 4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집단의 구조

- 앞선 3장의 분석을 통해 두 통계 간 격차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 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본 장에서는 경찰 상에서 임금근로자 축 내부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정보를 제공하는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자료를 활용하였음
  
-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상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미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두 집단 모두 사업장가입\* 경로를 통해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연금\*\*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일하나, 연금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
    - \*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는 직장가입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통일성을 위해 사업장가입으로 표기함
    - \*\* 경찰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지역가입자는 이미 공적연금 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는 반면, 미가입자는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연금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완전한 제도 밖 집단임
  - 따라서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표 4-1>과 <그림 4-1>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집단은 지역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 상용근로자보다 임시근로자에서 큰 규모로 나타남
  -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상용근로자의 지역가입자(11.1만 명)와 미가입자(10.9만 명) 규모는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전체 대비 약 5% 수준으로 크지 않음
  - 반면, 임시근로자는 지역가입자 75만 명(약 32%), 미가입자 134.5만 명(약 58%)에 달함
  
-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전체 규모는 2016년 317.1만 명에서 2023년 231.5만 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 이는 주로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근로자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임시 지역가입자: 2016년 84.7만 명 → 2023년 75만 명
    - 임시 미가입자: 2016년 220.2만 명 → 134.5만 명

○ 반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상용근로자 규모는 증가함

- 상용 지역가입자: 2016년 4.2만 명 → 2023년 11.1만 명

- 상용 미가입자: 2016년 7.9만 명 → 2023년 10.9만 명

<표 4-1>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는 상용·임시근로자 집단 구성

(단위: 천 명)

연도	상용 지역가입자	상용 미가입자	임시 지역가입자	임시 미가입자	합계
2016	42	79	847	2,202	3,171
2017	44	103	793	1,970	2,911
2018	50	101	735	1,798	2,684
2019	76	105	742	1,711	2,634
2020	83	94	701	1,430	2,308
2021	89	108	776	1,473	2,445
2022	95	73	824	1,302	2,295
2023	111	109	750	1,345	2,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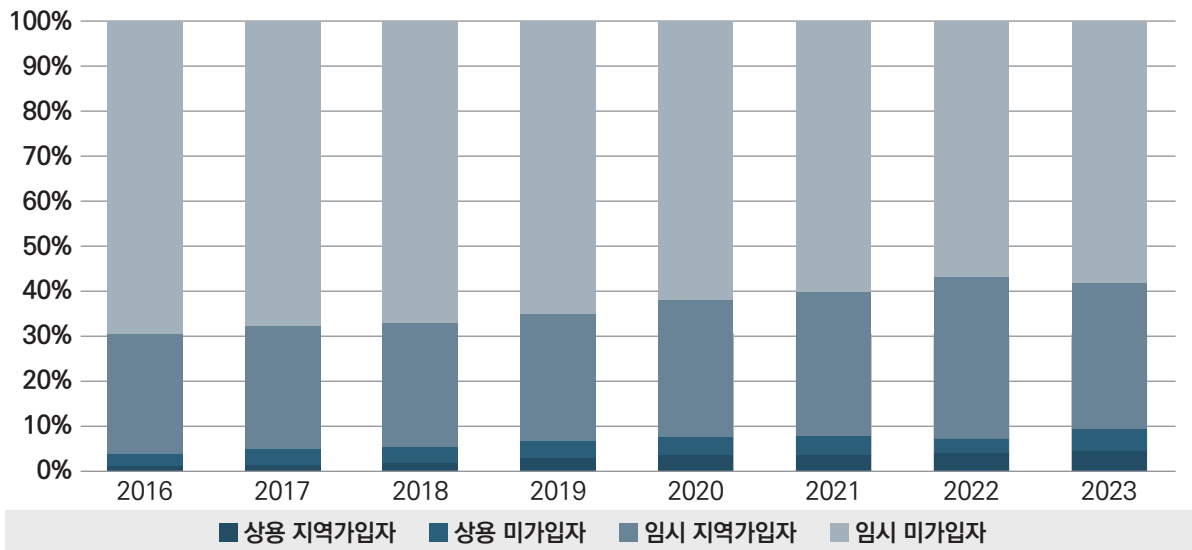
주: 1) 가입자(근로자) 수는 원자료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됨

2) 표의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백 명)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으며, 합계는 반올림 전 원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4-1>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는 상용·임시근로자 집단 구성비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 정리하자면,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임시근로자 부문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그러나 전체 대비 비중 측면에서는 여전히 임시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아울러 전체 규모가 감소하는 중에도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상용근로자의 규모(특히 지역가입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표 4-2>의 결과를 보면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입률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됨
  -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지역가입률(0.77%)과 미가입률(0.76%)은 1% 미만인 반면, 전체 임시근로자 대비 지역가입률은 24.49%, 미가입률은 43.9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는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가 규모뿐만 아니라 비율 측면에서도 임시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표 4-2> 2023년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특성

(단위: 천명, %)

구분	지역가입자 (A)	미가입자 (B)	합계 (C=A+B)	전체 근로자 (D)	지역가입률 (A/D)	미가입률 (B/D)	
<b>A. 고용형태별</b>							
상용근로자	111	109	220	14,409	0.77	0.76	
임시근로자	750	1,345	2,095	3,061	24.49	43.96	
<b>B. 단시간근로 여부</b>							
상용	주15시간 이상	98	98	196	13,926	0.70	0.70
	주15시간 미만	13	12	25	483	2.73	2.40
임시	주15시간 이상	651	957	1,608	2,536	25.66	37.75
	주15시간 미만	99	388	487	525	18.85	73.98

주: 1) 근로자 수는 원자료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됨

2) 가입자(근로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백 명)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으며, 합계와 가입률은 반올림 전 원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전체를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임
  - 현행 국민연금법상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기초수급자 등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함

- <표 4-2>의 단시간 근로(주 15시간 미만) 기준은 사업장가입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집단이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규모 내에 실제로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표 4-2>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내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 기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됨
  - 동일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는 비중이 다르게 나타남
    - 상용직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약 5% 정도만이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 머무는 반면, 임시직의 경우 약 93%가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임
  -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내부에서 주 15시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임시직 미가입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짐
    -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상용직 집단 중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비중은 지역가입 약 12%, 미가입 약 11% 수준인 반면 임시직 집단에서는 지역가입 약 13%, 미가입 약 29%로 더 높게 나타남
  - 즉,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집단은 지역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눌 뿐만 아니라,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된 실질적 사각지대와 단시간 근로처럼 제도적 적용 예외 집단이 혼재되어 있음

## 5 나가며

-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국민연금 행정자료 간의 규모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체계가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자를 어느 정도 포착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 간극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두 자료 간 전체 격차는 2016년 346.1만 명에서 2023년 250.3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격차의 구조를 임금근로자 측과 자영업자 측으로 분해한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격차의 약 89%가 임금근로자 측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임금근로자 측 내부를 살펴본 결과,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중심은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음이 나타남
  - 전체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2023년 기준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약 9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이 중에서도 임시 미가입자가 약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결국 사업장가입 체계 밖 집단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근로자 집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괄하려는 노력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 다만, 본고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근로자 집단 내에는 제도적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법적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된 집단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임
  - 실제로 사업장가입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 내에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임시근로자 집단에서는 약 23%, 상용근로자 집단에서는 약 11% 정도가 사업장가입 제외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금이슈 & 동향분석(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은

연금제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 제공을 통해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http://institute.nps.or.kr>) - 연구 자료실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한정림

**발행처** 국민연금연구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063. 713. 6776

**Fax** 063. 900. 3250